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9. 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 교류 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파키스탄 야권 지도자 부패 혐의로 구속 1
- 케냐 전 체육부 장관 리우 올림픽 뇌물 혐의로 기소 3
- 우크라이나 반부패 활동가 황산 공격으로 사망 4
- 이멜다 마르코스, 부패 혐의로 수 십년 징역형에 처해져 6
- 내부신고자, 단스케 은행 스캔들에 더 많은 관련자 밝혀 9
- 멕시코 신임 대통령, 중남미를 변화시키는 반부패 열풍에 동참 ... 11
-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16

II 국제회의 동향

- 2018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및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회의 ... 19
- 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21
-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22
- 2018년 제2차 OECD 청렴작업반회의 23
- 2018년 ADB/OECD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및 워크숍 24
- 2018년 제2차 국제청렴네트워크 총회 25

III 옴부즈만 소식

- 캐나다: 본인의사에 반하여 의료기관에 수용된 환자의 이의제기 처리 대기시간 지나치게 길어 26
- 호주: 18개월간 복역한 빅토리아주 여성 소송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 28
- 영국: 신임 옴부즈만, 철도 통근자를 위한 빠른 민원창구 제공 ... 31
- 리투아니아: 의회옴부즈만 의회에 국영방송사 독립성 제한 법안 철회 촉구 ... 34
- 태국: 태국 옴부즈만 임명 36
- 호주: 빅토리아주 옴부즈만 토지 관련 문제 처리 건으로 웰링턴 시의회 조사 ... 38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파키스탄 야권 지도자 부패 혐의로 구속 (The New York Times, 2018.10.5)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이자 야당 총재인 셰비즈 샤리프는 서민주택 관련 부패 혐의로 반부패 기구인 국가책임원에 체포되었다.

-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의 동생이기도 한 파키스탄 국회의 야당 지도자가 지난 금요일 파키스탄 반부패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관련 당국이 밝혔다.
-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의 총재 무함마드 세바즈 샤리프(Muhammad Shehbaz Sharif)는 파키스탄 동부의 라호레시에서 파키스탄 반부패 법원인 국가책임원(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담당자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토요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당국이 밝혔다. 샤리프는 파키스탄 편잡주(州)의 주지사 재임 당시 편잡주에 도입됐던 서민주택 관련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 샤리프의 체포는 여러 뇌물과 부정부패 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던 샤리프 일가에 새로운 일격을 가했다. 올해 나와즈 샤리프 총리와 그의 딸 마리암 나와즈 샤리프(Maryam Nawaz Sharif)가 부패 관련 혐의로 구속되고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 무함마드 세바즈 샤리프는 2017년 7월 형에 의해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로부터 당 대표로 지명되었으며, 지난 3월에 공식적으로 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법원은 나와즈 샤리프의 정당 대표 자격과 공직 취임 자격을 박탈했다.
- 세바즈 샤리프는 행정능력 및 여러 대규모 인프라 사업 감독 능력으로 명성을 쌓는 동시에 여러 부패 사건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 두 형제 모두가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을 향한 혐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와즈 샤리프는 파키스탄 군부세력이 조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와즈 전 총리와 군부 사이의 적대적 관계는 2013년 취임 직후 시작되었다.

- 수차례의 쿠데타를 통하여 파키스탄 역사의 절반 이상 파키스탄을 지배했던 군부는 모든 정치적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 지난 7월 총선을 통해 취임한 임란 칸(Imran Khan) 신임 총리는 부패 근절에 선거운동의 초점을 맞췄으며, 관련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을 공언했다. 칸 신임 총리는 전 샤리프 총리가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심각한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샤리프 일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칸 신임 총리는 8월 선거 승리 직후 연설에서 ‘나랏돈을 빼들린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 칸 신임 총리 지지자들은 금요일 나와즈의 체포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국영 뉴스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보당국장 초드리 파와드 후세인(Chaudhry Fawad Hussain)이 ‘이번이 첫 번째 체포이고 이후에 더 많은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당 당원들은 나와즈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파키스탄무슬림리그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오래된 수법으로, 중국과 터키가 세바즈 샤리프의 업적을 치하하고 있는 와중에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 중국에서 샤리프의 업적을 치하한 것은 주로 편잡 지방에서 중국 기업들이 시공한 몇몇 인프라 사업의 빠른 완공을 지원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 이번 체포의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 11석 및 지방의회 19석에 대한 보궐선거가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의 결과가 샤리프 전 총리의 정치생명 지속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칸 총리의 신임정권에 대한 1차 성적표를 제시할 것이다.

※ 원문기사 : Pakistan Opposition Leader Is Arrested on Corruption Charges (The New York Times, 2018.10.5)

케냐 전 체육부 장관 리우 올림픽 뇌물 혐의로 기소 (Reuter, 2018.10.13)

케냐 검찰청은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부패를 저지른 혐의로 전 체육부 장관 및 고위공무원들을 기소하였다.

- 지난 토요일 케냐 검찰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케냐 전 체육부 장관이 2년 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 케냐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모두 육상 종목에서 획득하면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으나 고위 공무원 및 국가대표팀 대표와 관련된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지면서 빛이 바랬다.
- 조사 결과 당시 체육부 장관 핫산 와리오(Hassan Wario) 및 5명의 전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 혐의가 밝혀졌다. 이들은 직권남용 및 불법행위 등 10개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누르딘 하지(Noordin Haji) 검찰총장이 말했다.
- 올해 주 호주 케냐 대사로 임명된 와리오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와리오 이외에 전 케냐 올림픽 위원회 킵초게 케이노(Kipchoge Keino) 위원장 등 다섯 명의 전 공무원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하지 검찰총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수들 격려를 위한 자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로 인해 선수들이 최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와리오 전 체육부 장관과 기타 공무원들은 545,905달러 이상의 손실금액과 관련하여 기소될 예정이다.
-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만연한 뇌물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에 옮기면서, 고위 공무원과 재계인사 수 십명이 다양한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 전문가들은 2013년 당선 시 케냐타 대통령이 내세웠던 반부패 공약과는 달리 지난해 종료된 첫 번째 임기 동안 부정부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원문기사 : Kenya's ex-sports minister to be charged over Rio Olympics graft (Reuter, 2018. 10. 13.)

우크라이나 반부패 활동가 황산 공격으로 사망 (INDEPENDENT, 2018.11.5)
 우크라이나 시의원이자 반부패 활동가인 한즈유크는 황산 공격으로
 전신 40% 화상을 입은 지 3개월 만에 사망했다.

- 우크라이나 반부패 활동가가 황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지 3개월 만에 사망했다.
- 카테리나 한즈유크(Kateryna Handzyuk)는 헤르손 시의회 의원이자 경찰 부정부패 및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분리주의에 대항하는 유명한 시민운동가였다.
- 지난 7월 33세의 한즈유크는 황산 공격으로 전신의 40%에 화상을 입었다.
- 공격 이후로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한즈유크는 총 11번의 수술을 받았다.
- 한즈유크는 입원 중에도 계속해서 반부패 시위를 촉구하는 동영상들 SNS에 올렸다.
- 한즈유크는 병상에서 제작한 동영상에서 ‘지금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또한 ‘내가 이렇게 많이 다쳤지만 우크라이나의 정의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우크라이나의 정의는 아무도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당시 한즈유크에 대한 황산 공격은 ‘공격행위’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로 ‘살인미수’ 사건으로 변경되었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5명이 체포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 주 우크라이나 영국 대사 주디스 고우(Judith Gough)는 자신의 SNS에서 한즈유크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 주디스 고우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카테리나 한즈유크의 사망 소식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부상을 용기와 품위로 이겨내 왔다. 그녀에게 공격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제 사면위원회 우크라이나 지부의 옥사나 포칼추크(Oksana Pokalchuk) 위원장은 한즈유크를 ‘두려움을 모르는 시민사회 운동가’라고 평했다.
- 포칼추크 위원장은 ‘카테리나 한즈유크의 사망은 지난해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시민사회 운동가에 대한 잔혹한 공격 중 하나로서, 이러한 공격의 실제 가해자 중 일부만이 체포되었고 공격을 실제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지금까지 당국은 일부 개별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광범위한 패턴과 수많은 특정 사건들은 간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 ‘카테리나 한즈유크가 남긴 업적이 그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녀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당국이 시민사회 운동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7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에서 반부패 운동가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였고 그 중 55건이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 지난 9월 반부패 운동가 올렉 미카일리크(Oleg Mikhaylik)가 오데사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으로부터 가슴에 총을 맞았다.
- 미카일리크는 란제론 해변에서 불법 건축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던 도중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 지난 10월에는 정치인 세르기 구스토브스키(Sergiy Gusovsky)가 키예프 시의회 건물 내에서 살균제 용액을 뒤집어쓰고 구타를 당했다.
- 구소프스키는 다양한 투자 계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 원문기사 : Ukrainian anti-corruption activist dies after acid attack (INDEPENDENT, 2018. 11. 5.)

이멜다 마르코스, 부패 혐의로 수 십년 징역형에 처해져 (The New York Times, 2018.11.9)
 필리핀 반부패 특별법원은 필리핀 전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에게 뇌물죄 등 7개 부패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최소 징역 42년 형을 선고했다.

- 필리핀 법원은 지난 금요일, 사치로 유명했던 전 영부인 이멜다 R. 마르코스(Imelda R. Marcos,) 여사를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민간 재단을 설립한 혐의로 최소 징역 42년형에 처했다.
- 그러나 현재 89세의 미망인인 마르코스 여사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뇌물과 공공부문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가 가능함을 명시했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르코스 여사는 고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현 대통령의 비호 아래 마르코스 여사와 그 일가가 필리핀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와중에 마르코스 여사에게 위와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마르코스 여사에게 7가지 뇌물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 최소 6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현직 하원의원인 마르코스 여사는 공직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됐다.
- 마르코스 여사는 판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금요일 오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마르코스 여사는 자신의 변호인이 판결을 분석하고 있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은 마르코스 여사의 남편 페르난디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대통령의 잔혹한 독재를 찬양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대파 일부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 1970년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으로 고문을 받은 바 있었던 로레타 앤 로잘레스(Loretta Ann Rosales) 전 필리핀 인권위원장은 이번 징역형 판결에 대하여 독재에 맞서다 죽음을 맞이한 수천 필리핀 국민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 로잘레스 여사는 인터뷰에서 ‘기빠서 펄쩍펄쩍 뿔 정도다’라고 말했다. 로잘레스 여사는 ‘이 어두운 밤에 아직도 촛불을 켜고 진실을 추구하는’ 판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 로잘레스 여사는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하여 수백만 필리핀 국민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동안 국고를 약탈하여 사치스런 생활을 해 왔던 마르코스 일가와 그 측근의 유죄가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 마르코스 여사와 그 변호인 모두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마르코스 여사의 혐의에 대한 기소가 25년 이상 걸렸고 이는 주로 증인의 대부분이 이미 사망했거나 증언을 하기에는 너무 고령이기 때문이었다.
- 마르코스 여사에 대한 혐의는 1991년 처음 제기되었는데, 당시 중앙 검찰청에서 마르코스 여사가 스위스에 민간 재단을 설립하고 1978년 ~ 1984년 마닐라 주지사 재임 당시 몇몇 회사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마르코스 일가가 국고로부터 빼돌린 돈을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필리핀 검찰청에서 마르코스 여사에 대한 기소 절차를 2015년 완료했지만, 마르코스 여사의 변호인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공판을 지연시켜 왔다.
- 마르코스 여사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중에는 필리핀의 전 법무차관 프랑크 차베스(Frank Chaves)도 포함되어 있었다. 차베스는 스위스에 위치한 재단을 통해 마르코스 여사가 수 백만달러를 은닉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 일가가 스위스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던 6억 5천8백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국은 해당 금액이 마르코스 일가가 필리핀 국고에서 빼돌린 100억달러 상당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 페르난디드 마르코스의 20년간의 독재정권은 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종결되었다. 마르코스 일가는 하와이로 추방당했고 3년 후 페르난디드 마르코스는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 페르난디드 마르코스의 사망 이후 마르코스 일가의 본국 귀환이 허용되었고 이들은 고향인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노르테주에서 정치적 재기의 기반을 다졌다.
- 마르코스 일가의 정치적 명운은 2년 전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페르난디드 마르코스의 팬을 자처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북부지역에서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대하여 마르코스 일가에게 공을 돌렸다.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페르난디드 마르코스의 유해를 필리핀으로 옮겨 마닐라의 국가유공자 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면서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한 같은 해 부통령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패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의 항소를 지지하기도 했다.
-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변인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는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파넬로 대변인은 '마르코스 의원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번 사태의 전개는 필리핀의 사법체계가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공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딸 아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는 내년에 필리핀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며, 최근 아버지의 잔혹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는 인권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며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제 '그만 잇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Imelda Marcos Is Sentenced to Decades in Prison for Corruption (The New York Times, 2018. 11. 9.)

내부신고자, 단스케 은행 스캔들에 더 많은 관련자 밝혀 (The Guardian, 2018.11.19)

단스케 은행 전직 간부인 하워드 윌킨슨은 불법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단스케 은행 스캔들에 다른 은행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다.

- 내부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약 2천억 유로(1천7백8십억 파운드) 규모의 단스케 은행 자금세탁 스캔들에 주요 유럽 대출기관 하나와 두 개의 미국 은행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단스케 은행 발트해 지역 본부장이었던 하워드 윌킨슨(Howard Wilkinson)은 덴마크 의회 청문회에서 단스케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수십억 달러 상당 자금의 처리에 다른 대출기관들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 영국인인 하워드 윌킨슨은 또한 ‘해당 은행을 통해서 (문제의 대형 유럽 은행) 미국에서 1천5백억 달러(1천1백7십억 파운드)가 처리되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이에 연루된 대출기관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 덴마크와 미국, 에스토니아, 영국 당국은 2007년~2015년 사이에 작은 규모의 단스케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 2천억 유로 상당의 자금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윌킨슨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아무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자금을 최종적으로 목격한 것이 이 세 군데의 미국 은행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쪽에서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돈은 이미 글로벌 금융계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도이체 방크와 JP모건, 아메리카뱅크가 탈린에 위치한 단스케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을 통해 문제의 달러 거래를 처리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JP모건이 2013년도에 해당 지점과의 거래 관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고 도이체방크 역시 같은 해에 거래를 종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이 월킨슨이 증언에서 언급한 은행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 단스케 은행이 월킨슨에게 발설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스케 은행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달, 월킨슨은 결국 미국 당국에 증언을 했다.
- 월킨슨은 2014년 1월에 영국 유한책임회사들이 연관된 계좌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세 개의 계좌 일부를 살펴보았지만 같은 해 4월에 ‘은행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 월킨슨은 ‘모든 거래내역이 가짜였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이 모두 똑같았다. 그리고 이들 예금주 모두가 런던 북부 교외에 등록된 동일한 회사였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4월에는 이들 계좌 중 어떤 것도 동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말했다.
- 월킨슨은 또한 ‘나는 단스케 은행에 해당 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고 경찰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 이제 월킨슨은 문제의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월킨슨은 ‘문제의 자금을 제대로 추적하고 범죄자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월킨슨의 증언에 뒤이어 덴마크 의회 청문회에서 단스케 은행의 임시 CEO 제스퍼 닐슨(Jesper Nielsen)은 은행의 이미지 손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닐슨은 ‘사회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배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사안의 전개는 우리 은행의 목표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Whistleblower reveals more players in £178bn Danske Bank scandal (The Guardian, 2018. 11. 19.)

멕시코 신임 대통령 중남미를 변화시키는 반부패 열풍에 동참 (The Washington Post, 2018.11.29)

신임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공직자 특권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 척결 캠페인을 추진하여 멕시코를 청렴한 사회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 중남미 전역의 전통적 정치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뇌물 문제에 대한 반발과 반기득권 지도자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는 반부패 열풍에 힘입어 당선된 신임 멕시코 대통령이 12월 1일 토요일에 취임한다.
- 부정부패 스캔들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수사를 통하여 20세기 후반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중남미의 가장 중대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최소 10명 이상의 전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징역형에 처해졌고 또는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 오랜 시간 동안 부정부패는 중남미 경제 성장을 저해해 왔다. 부정부패는 멕시코의 연간 GDP의 약 2%를 잠먹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는 중남미 국가 정치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었다.
- 이러한 관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중남미 국가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정치 이단아들에게 표를 던졌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멕시코에서는 좌파 정치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브라질에서는 내년 1월 1일, 군 장성 출신 극우 정치인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취임할 예정이다.
- 중남미 지역에서 오래 생활한 미국 외교관으로 2014~2017년 주 온두라스 미국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D. 넬론(James D. Nealon)은 ‘중남미 사람들이 더 이상 부정부패를 참고 견딜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임계점에 곧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부정부패 관행이 점점 더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막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내딛은 중남미 국가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중남미 전문가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zky)는 최선의 경우 중남미의 반부패 열풍을 통하여 19세기 말~20세기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인 정부 개혁 운동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

- 레비츠키 교수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정치제도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포퓰리즘 정치인이 당선되고 독재 정치인이나 독재 국가적 정책 등이 재출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전 독재정권을 옹호한 바 있다.
- 여러 의미에서 최근의 반부패 열풍은 수 십년 전만 해도 수 백만명이 독재정권에 시달리던 중남미 지역에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오늘날 이 지역 국가들의 사법부 독립성이 강화되었으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의 검찰은 최근 허용된 양형 거래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부패 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검사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로서, 국영 석유회사와 중남미에서 가장 큰 건설 대기업 오데브레히트를 둘러싼 대규모 뇌물 스캔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스캔들에는 미첼 테메르(Michel Temer) 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으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하원의원과 주지사 다수가 연루되어 있기도 하다. 중남미 국가 십여 곳의 정치인과 공직자들 역시 관련 조사를 받았다.
- 멕시코 외무심의회의 루이스 루비오(Luis Rubio) 위원장은 오데브레히트 사건으로 인하여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 중남미 국가 중 오데브레히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은 멕시코를 비롯하여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도 십 수명의 전직 주지사가 오데브레히트와 연관되지 않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징역형에 처해졌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 중남미에서는 사법부 이외에도 많은 국가기관이 부정부패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수사와 새로운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부패와 무책임에 반대하는 멕시코인’의 마리아 암파로 카사르(Maria Amparo Casar) 대표는 현 추세와 관련된 분명한 사례를 제시한다. 카사르 대표에 따르면 1996년에 멕시코 신문 혹은 방송사에서 보도한 부정부패 관련 사건의 숫자는 502개에 불과했으나, 그로부터 20년 이후 그 수는 38,917건으로 급증했다.

- 카사르 대표는 ‘최근 부정부패 사건 자체의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소셜미디어로 인하여 정부가 저지르는 부정행위의 폭로가 급격히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15년 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멕시코 국가수자원공사 사장과 그 가족이 휴가를 가는 길에 공무원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 멕시코에서는 오랫동안 고위 공직자들이 사적 목적의 여행에 공무원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공개로 의혹이 사실일 확률이 높아지면서 스캔들이 터져 나왔고 문제의 공직자 데이비드 코렌펠트(David Korenfeld)는 공식 사과를 발표하고 항공료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가가 아니라 의료시설로 향하는 길에 헬리콥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반부패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는 UN위원회가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정부 당국의 수사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15년 당시 오토 페레스 몰리나(Otto Perez Molina)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현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선거자금 관련 수사 전개가 가능해졌다. 무죄를 주장하는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8월 UN위원회를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멕시코 정치의 근간이었던 일당독재 체제 하에서 부정부패는 정치의 일부분과 같은 것이었고, 공직자들은 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자금을 공여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집권했던 제도혁명당(PRI)은 결국 언론 통제력을 잃게 되었다.

-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엔리케 페나 니에토(Enrique Pena Nieto) 전 대통령의 제도개혁당은 영부인의 고급주택 매입과 부패 공안경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43명의 실종 등 부정부패 스캔들로 곤혹을 치러왔다.
- 이러한 스캔들로 인하여 멕시코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화창한 날 저녁 옛 식민지 시절 멕시코시티 중심지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던 28세 여성 사무직 근로자 클라우디아 오르티스(Claudia Ortiz)는 부정부패가 ‘매우 명백해졌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부정부패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했다.
- 클라우디아 오르티스는 지난 7월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표를 던졌다. 오르티스는 ‘오브라도르는 매우 진실되고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 실제로 오브라도르는 부정부패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면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부정부패라는 사회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만연한 폭력의 이유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당시 ‘전우’라고 하더라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그러나 그 이후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과거 부정부패 사건과 연관된 일부 공직자들을 당에 영입하면서 반부패 진영이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정권 하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의혹을 받는 사람들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국익을 위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신임 정부가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고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또한 카르멘 아리스테gui(Carmen Aristegui) 기자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적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며, '나의 초점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말했다.

- 반부패 전문가들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뇌물 근절 계획에 충분한 제도적 변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청렴성이 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 '부패와 무책임에 반대하는 멕시코인'의 카사르 대표는 '오브라도르는 부패 척결을 의지의 문제,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마음을 먹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공직자 특권 축소를 위한 50개 계획을 포함하여 자신이 내세우는 부패 척결 캠페인이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임 대통령이 제시한 부패 척결 방법에는 대통령 직속 단일 기관으로 모든 공공계약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패 혐의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국민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표를 던졌고 나는 누구의 부정행위도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Mexico's new leader is riding a wave of anti-corruption furor that's changing Latin America (The Washington Post, 2018. 11. 29.)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VOA, 2018.12.9)

미 국무부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 세계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미국의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반부패의 날을 지정한 UN에 따르면 해마다 부정부패로 인해 세계 경제에 2조6천억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UN은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부정부패는 모든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어떠한 국가나 지역, 지역 사회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 부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2조6천억 달러의 손실은 전세계 GDP의 5%에 달한다.
- UN은 연간 부정부패를 통한 부당이득 중 1조 달러는 뇌물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패트리샤 모레이라(Patricia Moreira) 이사는 ‘세계 부패바로미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해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지에 밝혔다.
- 모레이라 이사는 전 세계의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 반부패의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부패 협약

-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UN은 모든 국가들에게 UN반부패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반부패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미국 국무부는 금요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정부패는 범죄와 테러를 조장하며 경제 성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 또한 ‘궁극적으로 부정부패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전 세계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모레이라 이사는 전 세계 부정부패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모레이라 이사는 부정부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과 빈곤층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서 전 세계의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덧붙였다.
- UN 개발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서 부정부패로 인하여 손실되는 금액이 공식적으로 개발원조 금액의 10배에 달한다고 강조한다.
- 그렇다면 부정부패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 UN은 2003년 총회에서 UN반부패협약의 채택과 함께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 세계 반부패의 날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 세계 정부에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문제 해결

- 모레이라 이사는 효과적으로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부패를 경감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각국 정부들은 그러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메커니즘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레이라 이사에 따르면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모레이라 이사는 '부패 척결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세계를 더 지속

가능한 곳, 지금보다 더 사회적 정의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 모레이라 이사는 또한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부문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요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부정부패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성명서는 또한 미국이 국무부 및 미 국제개발기구를 통하여 파트너 국가들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모레이라 이사는 전 세계가 부패와의 전쟁에 성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또한 '그래서 우리는 부패에 맞서 싸울 수 있고 실제 성과가 있다는 특정 사례들을 전 세계에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부패 척결이 세계의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World Marks Anti-Corruption Day (VOA, 2018. 12. 9.)

2 국제회의 동향

1 2018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및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8. 10. 8(월)~10(수)/프랑스, 파리 OECD 본부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8. 10. 9(화)~11(목)/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10.9(화)는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합동 회의(Joint session)

- 참석자 : G20 회원국,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세계은행·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30여 명

※ 우리 측 :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검사, 인천지검 검사,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서기관 등

2. 주요 결과

- 2018년 주요 주제로서 연중 논의된 '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 최종안이 도출되었으며, 최종안 회람 후 확정될 예정

- 우리 대표단의 요청으로 최종안에 공기업 운영에 대하여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 의한 감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반영됨

- '19-'21 반부패 실무그룹 행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큰 틀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합의됨

- 상기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의장국인 일본이 '19년 반부패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뇌물, 인프라, 내부 고발자, 새로운 기술(가상화폐 등) 등의 주제가 언급됨

- 일본은 내년도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인프라실무그룹간의 합동 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

- 특히, 상기 행동계획상 주요 논의 의제에 부패측정(measurement of corruption) 수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향후 3년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임
-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정책 장려제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약문을 발표함
 - 동 설문조사는 G20 국가들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부 반부패 정책을 마련 또는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여 비교·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지님
 - 특히 동 결과보고서는 상기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향후 기술이전 및 ODA 사업 필요 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스포츠분야 부패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동 분야에 대한 개념적 적립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기업, 시민 단체가 협력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
- '19년도 제1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19년 1.21-23(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회의는 4월중에 개최, 제3차 회의는 정상회담(6월 25-29간 개최 예정) 이후 개최될 예정

3. 대표단 활동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자료집을 발간하여 사무국 및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등에 배포
 - 동 조사 이행내용이 2018 G20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에 포함됨
- 우리 대표단은 내년도 의장국인 일본 대표단을 접촉하여 내년도 주요 의제중 하나인 내부고발자 관련,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하면서 3차에 걸쳐 진행될 내부고발자 관련 논의에 발제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

2 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8.10.21.(일) ~ 26(금) / 덴마크 코펜하겐 Bella Center
- 참석자 : 김태응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청렴총괄과 사무관, 국제교류 담당관실 사무관 및 에디터

2. 주요 결과 및 대표단 활동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국 수락연설
 - 차기 회의 개최국 정부대표 자격으로 제18차 IACC 폐막식 (10.24)에서 개최국 수락연설 및 개최국 홍보 진행
- 회의 개최 관련 정보 및 국제 반부패 동향 수집
 - 제19차 IA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관련 현지정보 수집, 차기 회의 주제·콘텐츠 발굴 및 국제 홍보 전략 마련
- 한국의 차기 회의개최에 대한 주요 반부패 전문가 의견청취
 - 국제투명성기구(TI), 월드뱅크, OGP등 국제 반부패 전문가들에게 2020년 한국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제언 및 의견청취
- 세션별 회의 내용
 - (개막 세션)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그리고 안보가 상호 의존적인 이유를 고찰하고 반부패 협약 등의 이행의 중요성 등 논의
 - (전체 세션) ① 굿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부패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제기구가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② 글로벌 부패 네트워크를 없애기 위해 모든 분야 행위자들과의 협력 방안 및 전략에 대해 논의 ③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한 권고안 도출
 - (워크숍) ① 조지아, 페루, 필리핀의 공공 서비스 분야 우수사례 소개 ② 반부패국제의원기구 소개 및 각국의 반부패 입법 활동 공유 ③ 부패척결과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가설 소개 및 논의

3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11. 12.(월) ~ 11. 14.(수) / 오스트리아 비엔나 VIC
 - 주관기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20개 당사국 정부, 유럽연합,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00명
- ※ 우리측: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주비엔나대표부 법무협력관

2. 주요 결과

- 사무국의 국가별 1주기 협약 이행점검 결과 증인 및 신고자 보호, 금융수사 역량 강화, 국제협력 분야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많이 도출됨
- “제3장 및 제4장의 이행에 관한 비구속적 권고사항과 결론”, “동결·압수·몰수 자산의 관리에 대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 및 “이행점검그룹의 의제와 운영방법”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의견 수렴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패널토론에서 UNCAC 이행점검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주제로 영국(동남아시아·동아프리카 지역 대상 자금지원 프로그램), 라이베리아(형법 등 개정 사례), 말라위(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사례) 대표가 주제발표 함

3. 향후 계획

- 니우에 대상 UNCAC 1주기 이행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및 공동점검국(사우디아라비아)과 협조하여 점검국 역할 수행
-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19.6월~'20.6월)에 대비하여 점검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관련 국내 법제 개선, 이행 실적 제고 등 협약 이행노력 강화

4 2018년 제2차 OECD 청렴작업반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11. 29(목)~30(금)/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 참석자 : OECD 공공행정위원회, 약 30여개국 대표단, 참관국 등 총 80여명
 ※ 우리측: 주오이시디대표부 참사관,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등

2. 주요 결과

- 공공청렴권고안 이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책임성 (commitment)'과 관련된 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렴성 감사 (integrity auditing)과 부패 위험평가, 열린 정부 (Open Government), 참여 독려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국가별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이 이루어 짐
-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순기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에스토니아 등의 사례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의 활동은 조직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OECD 회원국들과 청렴작업반 참석자들의 토의 과정을 거쳐 OECD 청렴 핸드북 제작될 예정이며, 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에도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됨

3. 대표단 활동

- OECD 공공청렴 권고안 8번(공직자가 직장에서 공공청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교육, 지침 및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한다.)과 관련하여, 권익위 청렴연수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청렴 교육 과정을 소개함
- 이스라엘 감사원 및 옴부즈만과 부패방지과 옴부즈만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5 2018년 ADB/OECD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및 워크숍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11. 6.(화) ~ 11. 8.(목) / 카자흐스탄
- 주관기관 : ADB/OECD 사무국 및 카자흐스탄 시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
- 참석자 :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원국 대표, UNDP 및 TI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관계자
 ※ 우리측: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및 주무관, 조달청 담당자

2. 주요 결과

- 공공청렴네트워크(Public Integrity Network, PIN) 회의는 2017년 제9차 ADB/OECD 컨퍼런스('17.11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회의체로서, 올해는 '공공조달분야 청렴'을 주제로 개최됨
 - 동 회의는 ADB 주최 공공조달 부패방지 워크숍과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워크숍에는 15여개국 조달/부패방지 담당 공직자들이 참석하여 공공 조달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요소 시뮬레이션을 직접 운영하는 등 실습 훈련이 진행됨
- 공공조달의 전자화 및 정보 공개가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언급되었으며, 전 조달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red flags)를 인지하여 조치하는 것이 부패를 예방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

3. 대표단 활동

- 우리 대표단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조달 정책을 소개함
 - 특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시스템과 조달 담당자등에 대한 청렴·윤리 교육 소개를 통해 부패 예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
- 카자흐스탄 부패방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내부 고발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공익신고자 제도를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반부패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길 희망함

6 2018년 제2차 국제청렴네트워크 총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12. 9.(월) ~ 12. 10.(화), 멕시코 멕시코시티 INAI 사무소
- 주관기관 :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INAI)
- 참석자
 - (총회) 10개 회원국, 옵저버국(엘살바도르) 등 총 11개국 30명 참석
 - ※ 우리 대표단 : 김현철 상임위원,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에디터
 - (국제포럼) 회원국 대표단 및 멕시코 공직자 100명

2. 주요 결과

- 청렴네트워크 연간 활동에서, 회원국의 관심사별로 워킹그룹 3개가 제안되었으며, 그룹별로 활동 결과물을 보고함
 - 제1그룹은 공공부문 윤리성 제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회원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제2그룹은 디지털 톨과 공개 데이터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였으며, 제3그룹은 부패척결 경험공유 서베이를 진행 중임
- 회원확대와 관련하여, 동 회의에 참석중인 엘살바도르가 가입을 희망하였으며, 브라질과 파나마는 가입을 추진 중임
- 부회장 선거에서 유일한 입후보인 루마니아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 국제포럼 패널에서는, 청렴네트워크 회원국 대표가 자국의 청렴윤리 정책, 재산등록제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사례를 공유함

3. 대표단 활동

- 권익위는 워킹그룹 1 소속으로 '공공부문 윤리성·책임성·청렴성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다수 수정의견을 제안하여 대부분 수용됨
-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부패예방정책으로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등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인식을 소개함

3 옴부즈만 소식

캐나다: 본인의사에 반하여 의료기관에 수용된 환자의 이의제기 처리 대기시간 지나치게 길어 (IOI, 2018.10.15)

퀘벡시 옴부즈만은 정신시설 강제수용자의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퀘벡 행정재판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퀘벡시에서는 법원 명령 및 의료기관의 판단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상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스스로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환자를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한 환자들은 퀘벡 행정재판소에 시설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이의제기 신청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퀘벡 민법 하에서 정신적 문제로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에서 명시하는 이러한 법적 수단의 적용은 이론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해당 사안에 대해 퀘벡시 옴부즈만의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퀘벡 옴부즈만 마리 린프레(Marie Rinfret)는 ‘시설 강제수용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은 긴급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옴부즈만 조사 결과 2015~2017년 사이에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사건 80%에 대하여 실제 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는데, 대부분 법원 심리 이전에 강제수용이 종료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 퀘벡 옴부즈만은 퀘벡 행정재판소에 5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부서에 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법제도 상 시설 수용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개선
 - ▶ 시설에 수용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정보 제공 강화
 - ▶ 시설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접수를 신속히 확인

- ▶ 긴급한 건에 대하여 화상심리 제도 이용 장려
 - ▶ 심리 연기 혹은 이의제기 신청 처리 유예 근거의 문서화
 - ▶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 지연 원인 평가
 - ▶ 퀘벡 행정재판소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퀘벡 옴부즈만을 통하여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 퀘벡 옴부즈만의 임무는 모든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청렴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 ※ 출처: CANADA ‘Overly long wait times for contesting confinement for people unwillingly kept in a health institution’ (IOI 홈페이지>News, 2018.10.15.)

호주 18개월간 복역한 빅토리아주 여성 소송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IO, 2018.10.16)

호주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신장애로 소송능력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도소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시설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빅토리아주 옴부즈만 데보라 글라스(Deborah Glass)는 심각한 발달 장애를 가진 39세 여성의 18개월형 복역에 대하여 ‘내가 옴부즈만직을 맡은 후 조사했던 사건들 중 가장 가슴 아픈 경우’라고 말했다. 오늘 빅토리아주 의회에서 글라스 옴부즈만은 소송능력이 없었던 한 여성의 수감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여성사건 처리가 빅토리아주 인권법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라스 옴부즈만은 ‘우리는 인도 주의적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처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에 따르면 2016~2017년 사이에 18개월간 데임 필리스 프로스트 센터(Dame Phyllis Frost Centre)에 수감되어 있던 해당 여성은 하루 최대 23시간까지 독방에 머물면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체중이 절반 이상 줄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레베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가족이 신청한 중재명령을 위반하고 경찰에 저항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야 소송 능력이 없고 정신장애 때문에 유죄 선고가 불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빅토리아주 법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황 상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을 때에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레베카는 다른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레베카가 유죄를 인정하고 나서 형을 선고받았다면 1개월 형에 처해졌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빅토리아주에는 레베카와 같은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한 안전한 치료시설이 없다. 레베카가 돌아갈 집이나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당국은 레베카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데 고심을 하고 있다.
- 글라스 옴부즈만에 따르면 레베카는 평생 동안 행동장애 문제를 겪어 왔으나 그녀의 상태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와 장애 지원 서비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레베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정확히 누구의 책임소관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레베카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레베카와 사회 모두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라고 말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레베카가 이와 같은 사건의 유일한 경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도소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야 했던 레베카와 같이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접했다. 이러한 사연들은 중대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감생활로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이들에게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우리에게 자문을 제공한 법정신의학자는 국가가 안전한 치료시설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빅토리아주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감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연방정부에 정신장애로 소송능력이 없거나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도소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 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공식 권고안을 발표했다.
- 또한 글라스 옴부즈만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7개안을 권고하였으며 두 부처 모두 이를 수용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했다.
 - ▶ 빅토리아주 내 교도소 여성 재소자 중 지적장애나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수동과 서비스 제공을 검토

- ▶ 빅토리아주 기회의 평등과 인권위원회에 독방수감, 알몸수색, 신체 구속과 같은 관행 및 데임 필리스 프로스트 센터에 수감된 정신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지원 제공 검토 요청
- ▶ 정신장애로 인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조율하고 감독하는 고위 담당자 임명
- 글라스 옴부즈만은 공익법무관실, 빅토리아주 법률구조기관, 대법원, 빅토리아주 법률연구원, 정신건강법센터, 호주 지역사회지원기구, 리버티 빅토리아, 예수회 사회복지서비스 등 이번 사건 조사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출처: AUSTRALIA ‘18-month imprisonment of a Victorian woman found unfit to stand trial’
(IOI 홈페이지>News, 2018.10.16.)

영국: 신임 옴부즈만, 철도 통근자를 위한 빠른 민원창구 제공 (IOI, 2018.11.26)

영국은 철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철도 이용객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철도 옴부즈만을 신설하였다.

- 새로운 철도 옴부즈만 서비스가 오늘 개시되면서 철도회사의 민원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철도 이용객들은 이제 독립적인 중재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철도 옴부즈만이 인정하는 고객 불만에 관한 결정은 철도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그러나 노동당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으며 치솟는 요금 및 운영 주체별로 다른 복잡한 요금 기준 등 철도 이용객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 철도 옴부즈만은 철도 운영주체의 응답에 이의를 가진 승객이나 민원 접수 후 40일 이내에 응답을 받지 못한 승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 철도 회사들은 철도 옴부즈만 운영비를 부담하고 그 결정에 따를 것에 동의했다. 철도 운영주체를 대표하는 '철도운송그룹'은 철도 옴부즈만의 신설이 소비자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철도 관련 민원 처리 절차의 기준을 높이고자 하는 업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 철도·도로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을 제기한 철도 이용객의 절반 이하만이 민원에 대해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탄원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 민원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 철도 옴부즈만은 주로 열차 지연과 승객 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 하게 될 것이다.
- 2017~2018년에 열차 지연에 대하여 8천만 파운드 이상이 승객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올해 5월 발생한 열차 시간표 혼란 사태로

인한 수천 건의 예약 취소와 심각한 지연으로 인하여 이 금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발간된 교통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 승객 중 39%만이 지연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승객 대부분은 보상금이 자신의 시간 낭비와 헛수고에 비해 너무 적다고 응답했다.

- 앤드루 존스(Andrew Jones) 신임 철도청장은 ‘철도 옴부즈만 신설은 승객의 권리를 위한 중대한 진일보이다. 이 독립적인 옴부즈만은 승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미흡한 공정 거래 관행을 철도회사에 자리 잡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철도회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고객 만족을 증진시켜야 한다’.
- 노동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내놨다. 앤디 맥도널드(Andy McDonald) 노동당 예비내각 교통부장관은 ‘5천만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상품이 존재하는 영국 철도요금체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요금 체계 중 하나일 것이다. 더 단순하고 부담 없는 요금을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철도 옴부즈만이 제시하는 규정은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고 그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철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평했다.
- 철도 옴부즈만의 서비스는 ‘분쟁해결옴부즈만’이라는 민간기관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분쟁해결옴부즈만’은 집기 철거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 철도서비스 감시단체 ‘트랜스포트 포커스’의 대표 앤소니 스미스(Anthony Smith)는 철도 옴부즈만 서비스가 ‘철도 승객 모두를 위한 진일보’로서 민원 처리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앤소니 스미스는 또한 ‘철도 승객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 중 철도 옴부즈만 제도의 영역 외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감시를 계속할 것이며, 철도 옴부즈만의 운영방식과 승객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철도승객 민원 처리절차에 대하여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소비자단체 '위치'(Which)의 알렉스 헤이만(Alex Hayman)은 철도 옴부즈만의 신설이 '오랫동안 자신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온 많은 철도 승객들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UK 'New ombudsman gives rail commuters a fast track for complaints'
(IOI 홈페이지>News, 2018.11.26.)

리투아니아: 의회옴부즈만 의회에 국영방송사 독립성 제한 법안 철회 촉구 (IOI, 2018.12.10)

리투아니아 의회 옴부즈만은 의회에 국영방송사에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인권분야 국제규범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리투아니아 의회 옴부즈만이 의회에 국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안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의회 옴부즈만 아우구스티나스 노르만타스(Augustinas Normantas)는 의회에 국영방송사에 정치적 혹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법 제 10조의 조항을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프로젝트 번호 XIIP-2656에 명시된 의회 임시 조사위원회의 특정 제시안을 검토하지 않고, 의회 옴부즈만실은 국가인권기관으로서 국영방송사의 독립성 보호를 옹호하고 있다.
- 의회 옴부즈만의 성명서는 ‘정보에 대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다양한 뉴스는 사회의 민주주의 절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 의회 옴부즈만은 리투아니아 헌법이 공익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 및 보호한다는 사실과 정보를 검색·수신·배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헌법 상 자유가 민주국가의 개방·공정·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 헌법 재판소의 의견을 강조했다.
- 또한, 의회 옴부즈만은 유럽인권재판소법 제10조를 다시 언급했는데, 해당 조항은 어떠한 민주사회이든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전제 하에 언론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송 및 기타 전자 매체를 통한 정보 송수신의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영 방송국의 활동에 대한 모든 국가적 개입은 유럽인권재판소법 제 10(2)조의 요건에 부합해야만 한다.
- 노르만타스 옴부즈만은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회의 각료위원회 결의안

제1번 '공영방송국의 미래'를 근거로 한 공영방송국 독립성에 대한 성명서에서 각 국가는 정치적·경제적 개입으로부터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회 옴부즈만실은 2018년 10월 26일 리투아니아 공화국 의회 의원 일부로부터 제XIII P-2656번 의회 결의안 초안 '리투아니아 공화국 의회 임시 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한 리투아니아 국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경영과 금융·경제활동과 관련한 의회 조사 결론에 관하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이 결의안은 리투아니아 국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영구조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의 공문은 해당 결의안이 리투아니아 국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의 독립성을 제한할 여지가 없는지, 인권 분야에서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 출처: LITHUANIA 'Seimas Ombudsman calls Parliament to avoid initiatives limiting independence of national broadcaster' (IOI 홈페이지>News, 2018.12.10.)

태국: 태국 옴부즈만 임명 (IOI, 2018.12.12)

미국 법무부는 8천5백3십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 지급, 3년간의 준법 보고서 제출 및 법률 위반 사실 인정을 한 페트로브라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 2018년 11월 18일, 태국의 마하 와치랄롱꼰 (Mahavajiralongkorn) 국왕의 임명에 따라 비다바트 라자타눈(Viddhavat Rajatanun) 대장 (전역)이 태국 옴부즈만에 임명되었다.
- 왕립군사학교를 수학과 탐마사트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비다바트 대장은 1975년 이후 2012년 국방부 장관대행으로 전역하기까지 오랫동안 태국 군에 복무했다. 비다바트 대장의 오랜 관련 경력에는 국방정보·우주기술부, 국방위원회, 국방부의 정책관 및 군사대법원의 판사직 수행이 포함되어 있다. 군 복무기간을 통틀어 비다바트 신임 옴부즈만은 국가안보 관련 작전뿐만 아니라 특히 태국 국경 접경지대와 검문소 인접지역 등 오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비다바트 대장은 옴부즈만으로서 태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 비다바트 대장은 방콕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2016년 이후로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또한 집행위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기도 했다. 비다바트 신임 옴부즈만이 추진해온 양자 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성과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공화국 옴부즈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독위원회, 일본 총무성,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권위원회(옴부즈만) 공인 올리 마질리스(Oliy Majlis) 등 세계옴부즈만협회 소속 기관들과 체결된 MOU에 잘 나타나 있다.
- 비다바트 대장의 임명과 함께 솜삭 수완수자리트(Somsak Suwansujarit) 역시 태국의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임명되면서 태국헌법 B.E.



2560(2017)에서 요구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숫자가 모두 채워졌다. 수완수자라트는 옴부즈만 선출위원회에서 후보로 지명되었고 태국 입법회의의 지지를 받아 옴부즈만에 임명되었다. 태국 헌법에 따라 옴부즈만의 임기는 7년이다.

- 솜삭 신임 옴부즈만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지역 담당관으로서 공공부문의 가버넌스 원칙을 강화하고 정부 당국에서 시행하는 공공 서비스의 표준화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이후 지방행정부 정책관, 재난예방·완화부와 내무부의 정책관직을 역임했다. 또한 난주(州), 농부아람푸주, 스리사켓주, 칼라신주, 콘카엔주, 라용주의 관찰사를 역임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경력을 통하여 솜삭 신임 옴부즈만은 지역 공동체, 민주주의 단체, 지역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였다.
- 현재 태국은 비다바트 라자타는 대표 옴부즈만, 분 타파나들 옴부즈만, 솜삭 수완수자리트 옴부즈만 세 명의 옴부즈만이 있다.

※ 출처: THAILAND 'Chief Ombudsman of Thailand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2018.12.12.)

호주 빅토리아주 옴부즈만 토지 관련 문제 처리 건으로 웰링턴 시의회 조사 (IOI, 2018.12.12)

호주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은 시의회가 지주들에게 건축 또는 접근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였다는 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 호주 빅토리아주의 데보라 글라스 옴부즈만은 깁스랜드 나인티마일 비치 지역의 토지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웰링턴 시의회를 조사할 예정이다.
- 25명 이상의 토지주가 건축이나 심지어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시의회가 요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몇몇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글라스 옴부즈만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이 이 복잡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옴부즈만실 담당자들은 웰링턴 시의회와 환경·토지·수자원·기획부에 후속 질의를 보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시의회가 이 지주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옴부즈만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웰링턴 시의회를 조사할 것이다.
 - ▶ 나인티마일비치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시의회 요금 및 기타 요금 부과와 징수
 - ▶ 자발적 소득세 지원제도 시행
 - ▶ 1986년 토지취득 및 보상법과 나인티마일비치 구역 토지관리계획에 부합하는 토지 취득 여부
 - ▶ 과잉취득으로 간주되는 토지에 대한 검토
 - ▶ 영향을 받은 토지주와의 연락
- 60년간 지속된 이 문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멜버른에 위치한 부동산 업체가 나인티마일비치 구역의 필지를 해변가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이상적인 곳으로 홍보하여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70년대부터 환경 문제로 많은 개별 필지들의 개발이 금지되었다.

- 1980년대에 도입된 토지계획 규칙에 따르면 개별 필지는 3~4 필지로 통합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에 시의회에서는 필지 통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했다. 2011년 도입된 재정지원 협약을 통하여 해당 구역 내 지정 구간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미납된 이자나 대금이 없는 한 필지 당 1,500달러 균일 가격에 시의회에 자발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2018년 10월, 시 정부는 과잉 취득으로 판단된 필지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글라스 옴부즈만에 제출된 민원에서 몇몇 토지주들은 시 정부가 애초에 낮은 가격에 매입한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글라스 옴부즈만은 조사의 일환으로 시의회의 결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 출처: AUSTRALIA 'Victorian Ombudsman to investigate Wellington Shire Council's handling of matters affecting land owners' (IOI 홈페이지>News, 2018.12.12.)